

심창욱 의원 65억 '최고재력가' 강기정 1년새 4억6천만원 늘어

이동현 도의원 133억 '최고' 김영록 1년새 8억여원 증가

광주 공직자 재산 공개

시의원 23명 평균 재산 9억원대 이명노 의원 마이너스 4415만원

정부 재산공개 대상 광주 지역 고위공직자 30여 명의 평균 재산은 10억원대며, 최고 재력가는 심창욱 시의원으로 신고액이 65억원대에 달했다.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광주 지역 고위 공직자 34명의 올해 재산 변동 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신고액 기준 60억원 이상 재력가는 1명, 30억원대와 20억원대는 각각 2명, 10억원 이상은 8명, 5억원 이상은 7명으로 집계됐다.

최고 재산가는 심창욱 시의원이다. 신고액은 65억 887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430만원 증가했다.

본인과 가족 명의의 유가 증권 51억9153만원, 아파트 9억5350만원, 예금 4억9257만원, 채권 21억 2100만원, 채무 22억7100만원 등을 등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재산은 증전가액보다 4억6588만원 증가한 10억9054만원으로 나타났다. 예금(급여·

선거 비용 보전에 따른 증액)이 5억 8500여 만원에서 7억 8800여 만원으로 증가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전년보다 1550만원 증가한 10억2540만원,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3880만원 감소한 31억8700만원을 신고했다.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 김태봉 위원장과 오운수 사무국장은 각각 22억880만원과 6억9900만원을 신고했다.

시의원 23명의 평균 재산은 9억원대에 달했다. 심창욱 의원이 가장 많았고, 이명노 의원이 -4415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광주시 유관기관장 중 최고재력가는 김덕모(재) 광주그린카진흥원 원장으로, 신고재산이 100억 원을 넘겼다.

5개 자치구 기초의원 중에선 황경아 남구의원이 130억원 대로 지난해에 이어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공개 대상자는 5개구 기초의원 69명과 그린카진흥원 등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 4명 등이다. 시장과 부시장, 시의원, 5개 구청장 등 34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했다.

박상지 기자

전남 공직자 재산 공개

명현관, 전국 기초단체장 중 10위 임형석, 신고 오류로 96.8% 급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전남지역 재산공개 대상자 92명 중 최고 재력가는 133억원을 신고한 이동현 전남도의로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행정·정부부지사, 기초자치단체장 22명, 전남도의원 61명 등 전남 공직자 92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올해 재산등록 대상자에는 전남도 정부부지사와 전남도의원 3명이 공개 대상에 추가됐다. 전남공직자 재산 총계는 1234억976만원으로 지난해 1571억 9422만원보다 337억8445만원(-21.49%) 감소했다.

평균 재산은 13억7121만원으로 지난해 17억4660만원보다 3억7538만원 줄었다.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이동현 전남도의원(보성2)으로 133억4685원을 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30억9510만원에서 보유 토지 가격 상승으로 2억5175만원 늘었으며 지난해에 이어 전남 공직자 중 최고 자산가로 등록했다.

다음으로 명현관 해남군수 81억8689만원, 김정이 도의원(순천8) 73억2000만원, 박병호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69억3529만원, 이상익 함평군수 68억 7722만원 순 등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임형석 도의로원으로 올해 13억1432만원을 신고해 지난해 415억 3479만원보다 402억2047만원이 줄어들었다. 임 의원은 지난해 시가 3700만원짜리 콘도회원권을 379억원으로 신고했다가 해프닝을 겪었다.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신고재산이 96.8% 급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장인 소유의 경기도 고양 소재는(6억700여만원)을 배우자가 상속하면서 재산이 증가했다. 지난해 18억61만원을 신고했지만 올해는 8억1395만원 늘어난 26억1456만원을 신고했다.

이날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 공무원, 1급 공무원, 시·군의원 등 249명에 대한 재산을 전남도 도보에 공개했다.

최황지 기자

이정선, 재산 늘고 김대중, 채무 증가

시·도교육감 재산 공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재산이 늘어난 반면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채무가 증가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부동산과 예금 등 총 14억 3255만5000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9월 공개된 재산보다 4417만4000원 증가했다. 이 교육감의 순천시에 실거처가 1200만원 상당의 임야 601㎡와 광주 동구 계림동 아파트(3억5300만원)를 신고했다.

배우자의 부동산은 4억8645만1000원으로 평가됐다.

예금 총액은 지난해 9월 7억7243만 5000원에서 7억9975만2000원으로 늘었다. 또 본인 소유의 2009년식 아반떼

(179만원)와 2012년식 쏘나타 하이브리드(632만원) 등 두 대를 보유하고 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의 재산은 지난해 9월 마이너스 6801만2000원에서 4억 9797만6000원 증가한 마이너스 5억 6598만8000원을 신고했다.

김 교육감은 곡성군에 1340만2000원의 토지(1015㎡)와 1900만원의 주택(대지 470㎡·건물 97.56㎡)을 보유하고, 배우자도 목포지역 대지(30.40㎡) 751만 5000원과 단독주택(대지 334.50㎡·건물 151.02㎡) 2500만원을 신고했다. 예금 등의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삼녀가 각각 1199만1000원, 3427만4000원, 1597만 9000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육감과 배우자의 채무는 지난해 4억5755만2000원에서 9억8095만5000원으로 늘었다.

양기림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9일 구례군 지리산정원에서 7개 단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공동 목표로 매년 1천만 그루 이상, 2050년까지 총 5억그루 나무심기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2050 탄소중립 실천·명품 숲 조성 온힘

7개 기관과 공동 대응 5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

전남도는 29일 구례 지리산정원 일원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명품 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나무심기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순호 구례군수, 유시문 구례군의회 의장, 정선화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황금영(사)숲속의 전남 이사장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광주

전남 관계관, 임업인, 전남도 본청 및 구례군 직원 500여 명이 참여했다.

도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7개 기관단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공동 목표로 정하고 매년 1000만 그루 이상 나무를 심어 2050년까지 총 5억 그루 나무 심기 달성에 상호 협력할 것을 협약했다.

7개 기관단체는 나무 심기와 숲 돌보미 활동에 참여하고 전남도는 협약이 성과를 내도록 행정·기술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이후에는 참석자 500여 명이 지리산 자생수종인 산딸나무, 배롱나무,

고로쇠나무 등 2000 그루를 심었다. 이날 심은 나무는 잎, 열매, 꽃이 아름다워 이산화탄소 흡수는 물론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한편, 전남도는 2021년 3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4대 핵심전략인 청정에너지, 청정산업, 청정생활, 청정산림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Net-Zero)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9240만톤을 목표로 산업 부문, 전환(에너지) 부문, 탄소흡수원 부문 등 7개 부문별 대책을 추진한다.

최황지 기자

광주시, 국립 마한역사 문화센터 유치신청서 제출

문화재청, 올 하반기 대상지 발표 "문화전당·비엔날레 시너지 창출"

광주시는 최근 문화재청에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마한역사문화의 대국민 전시·홍보 등을 전담할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올 하반기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나주시가 2022년 각각 추진한 마한유역에 따르면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광주와 전남에 분포돼 있는 마한역사문화유적은 620곳이다.

이중 광주 103곳, 나주 155곳, 영암 56곳, 해남 31곳 등의 마한유적이 분포돼 있다.

광주마한유적의 특징은 시기적으로 마한의 형성기에 해당하는 신창동 유적, 소멸기에 해당하는 월계동 장고분과 명화동 장고분이 모두 분포하고 있어 고대마한의

시작과 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광주시는 마한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해 광주 전역에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 마한문화유산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특히 다른 마한권역에서는 찾기 어려운 마을·취락유적 위주로 구성된 광주만의 특징을 확인했다.

이를 기반으로 2022년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의 마한역사문화권에 '광주'가 추가로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신창동 마한역사유적체합관을 개관, 마한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유치해 마한역사를 재조명하고 광주가 가진 세계적 문화자원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등과 시너지를 통해 2000여 년전 마한이 꽃피었던 찬란한 문화를 전세계에 알리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광주시, GGM 근로자 주거 지원 국비 3억 추가 확보

광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

근로자와 기업, 지역민, 지자체 등 각 경제주체들이 근로 여건과 투자 계획, 생

산성 향상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담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통해 발굴한 새로운 경제적 요소에 기초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확보한 국비 3억원은 GGM 친환경차 생산과 2교대 전환 관련 추가 인력채용 등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주거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주거비 지원 대상을 대리이하 근로자(연봉 4500만원 이하 과장 포함)로 확대하고, 금액도 월 20만원에서 27만2000원으로 늘려 지원하고 있다.

박상지 기자